

與野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안 합의

최우선변제금 10년 무이자 대출... 보증금 적용범위 확대

(4.5억~5억)

특별법 상정 25일만에 합의
경·공매 대행서비스 등 담겨
긴급 생계비·의료비 지원도

여야가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에 합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지난달 28일 특별법 상정된 지 25일 만이다. 최근 늘어나는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여야가 5차례 회의 끝에 이번에 특별법 제정에 합의하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도 빠르게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 단체들은 여야가 합의한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에 반발했다. 이에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수정안 마련을 위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2일 국토교통위 법안소위원회에서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 합의 처리했다. 정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점이었던 전세 피해 보증금 회수 방안은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특별법 적용 대상도 보증금 4억5000만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 피해자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하는 '원스톱 대행 서비스'도 특별법에 담았다. 대행 서비스에서 정부는 경·공매 비용 70%를 부담한다. 특별법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 활용 ▲전세 사기

피해자의 신용 회복 지원프로그램 가동 및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대한 긴급 생계비·의료비 등 지원도 담겼다.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은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뒤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는 특별법 시행 이후 사각지대로 인한 보완 사항이 발견되면 상시적으로 보완 입법할 방침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이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야당과 심도 있게 논의하며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선의 지원 조치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장 맹성규 의원은 "선(先) 보상, 후(後) 구상권 청구" 원칙은 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최우선 변제금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고, 최우선 변제금에 상응하

는 무이자 대출을 정부가 제시해 그 안을 받아들였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기자회견에서 "최선의 법안을 만들지 못해 죄송스럽고 안타깝다. 그럼에도 교섭단체 양당이 합의 의지가 확고한 상황이었기에 추후 계속해 수정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위원회 합의를 전제로 법안에 동의했다"고 입장을 냈다.

한편 윤재옥 국민의힘·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이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 처리된 뒤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국회의원 가상자산 재산 공개 의무 등록(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의원 당선인 재산에 가상자산 명시(국회법 개정안) 등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국가유공자 보상·지원 확대... 총선출마 생각해 본 적 없어”

박민식 보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총선출마 여부·전관예우 수혜 도마위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정해진 것 없어”

박민식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내년 4월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국가보훈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박민식 후보자의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한 답변이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보훈이 국민 일상 속 문화로 정착’, ‘국가유공자 보상·지원, 질적으로 대도약’ 등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내년 총선 출마 여부 질의에 “상투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1년 동안 새벽 4시쯤 일어나서 잘 때까지 국가보훈만 생각한다”고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답했다.

박 후보자는 현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되는 점을 언급한 뒤 “여기에 100% 다 쏟아부어도 모자랄 판”이라며 “정치적인 부분은 아직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보훈부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분골쇄

신할 각오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지난해 5월 보훈처장 임명 대가로 경기 성남시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불출마를 한 것”이라는 의혹을 두고도 “일부 언론 등에서 상당히 색안경을 끼고 지적한 것을 봤다”며 부인했다.

이 과정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총선 출마 같은 경우, 당에서 각 분야에 훌륭한 인재 있으면 찾아가서라도 출마시키고 하는 것”이라며 옹호하기도 했다. 다만 강 의원은 “지금은 장관 직분이니까 열심히 하시는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가 2006년 검사를 그만둔 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재산이 많이 늘어난 게 ‘전관예우’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 수용하기도 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관련 질문을 할 때 대해 박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서 맞

다고 본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재직할 당시 법무법인을 만들고, 변호사로 겸직할 게 아니냐는 의혹도 청문회에서 민주당 공세 대상이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관련 의혹을 언급한 뒤 “빠도 박도 못할,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당시 국회의원의 변호사 겸직 규정은 지금과 달랐던 것으로 안다. 2008년 9월 1일 자로 법제사법위원회에 변호사 휴직 신청을 확실히 했다”고 해명했다.

법무법인 직원 착오로 의원 시절, 변론을 맡은 변호인단 명단에 포함된 것이라는 박 후보자 주장에 박용진 의원은 “불법을 오해라고 주장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자 박 후보자는 “그게 사실이면 전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고 재차 해명했다.

청문회에서는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은 4·19 혁명으로 불명예 퇴진한 점 등을 이유로 반대 여론도 있다. 이와 관련 박 후보자는 “추진 여부, 추진 주체, 예산 등 정해진 게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다만 기념관 건립 필요성에 대해 “개인적 소신”이라고 말했다.

이승만 대통령, 백선엽 장군, 김원봉 애국지사 등이 국가보훈부의 예우 대상이냐는 질문도 있었다. 박 후보자는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김원봉 지사만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다. 박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대통령실 보훈비서관 신설 필요성’을 언급한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백번 지당한 말”이라고 답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보훈비서관 신설을 건의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박 후보자는 “직접은 아니지만 대통령실에 여러 번 전달한 기억이 있다”고 답했다.

/최영훈 기자

국민의힘 38.5%·민주당 42.4%... 오차범위 내 접전

리얼미터 정당 지지율 조사

김남국 논란에 민주당 지지율 하락

최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4%포인트(p) 넘게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났다. 가상자산 투자 논란을 일으킨 무소속 김남국 의원으로 인한 악재가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꼽힌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미디어트 리본 의뢰로 지난 15~1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당 지지율 조사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국민의힘은 지난주보다 2.2%p 오른 38.5%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지난주 대비 4.6%p 내린 42.4%였다. 정의당 지지율은 지난주와 같은 3.2%였다.

여론조사상 지지율 추이에서 민주당은 하락하고, 국민의힘이 오르면서 양당 간 격차는 3월 2주차 이후 10주 만에 오차범위 내(3.9%p)로 좁혀지게 됐다. 지난 주 여론조사에서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10.7%p였다.

국민의힘은 부산·울산·경남(5.1%p ↑), 인천·경기(2.5%p ↑), 대구·경북(2.2%p ↑)와 함께 민주당 정치적 뒷받침 광주·전라(2.2%p ↑)에서도 지난주 대비 지지율이 올랐다. 성별로는 남성

(3.2%p ↑)에서 지난주 대비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랐다. 연령대별로는 20대(12.0%p ↑), 30대(6.8%p ↑)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올랐다.

민주당은 정치적 뒷받침 호남권(광주·전라)에서 지난주 대비 2.6%p 하락했다. 나머지 지역별로 대전·세종·충청(9.8%p ↓), 부산·울산·경남(6.3%p ↓), 대구·경북(5.9%p ↓), 인천·경기(4.6%p ↓) 하락했다. 성별로는 여성(6.3%p ↓)과 남성(2.8%p ↓) 모두 떨어졌다. 연령대별로는 20대(12.9%p ↓), 30대(8.5%p ↓) 등 지난주 대비 지지율이 하락했다. 60대(3.8%p ↓)와 50대(3.1%p ↓)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내렸다. /최영훈 기자

정개특위, ‘가상자산 이해충돌 방지법’ 의결

“취득·보유 내역 전액 신고대상”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2일 국회의원보유한 가상자산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명시한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도 포함해 의정 활동에서 있을지 모를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단돈 1원의 가상자산이라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으면 전부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주식이나 채권 등의 자산 등록기준이 1000만원인 것을 비교하면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

이와 함께 특례조항을 통해 현재 21대 국회를 대상으로도 법안을 적용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적 이해관계 등록의 경우 국회의원 당선일로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이에 특례조항을 적용함으로써 21대 국회의원의 경우 임기 시작일로부터 올해 5월 30일까지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매매해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오는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소위원장인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은 등록폭이 워낙 크고 해서 다른 자산과는 별도로 단돈 1원이라도 전부 신고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